



12일 나주시 빚기림동 도로에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하루 11만원 이하로 지급할 것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독자 제공>

‘외국인노동자 일당 11만원 이하’ 나주시의회 현수막 내건 까닭은

나주시 일대에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11만원 이하로 지급해 달라’는 현수막이 게시돼 이목을 끌고 있다.

현수막은 나주시의회와 의원연구단체 ‘농촌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위한 연구회’, 나주배원예농협 등 이름으로 게시됐으며, 지난 10일 이후 나주시 20개 읍·면·동 전역에 내걸렸다.

이들 단체는 농촌에서 일손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된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오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한도를 정하겠다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농민들은 당장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자 양성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수막을 제작한 나주시의회는 “얼마전 개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건비 적정 기준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내린 결론이 외국인 적정임금은 11만원이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나주시 일대 농가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농가 부담이 커진데 대한 조치라는 것이 나주시 의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농어업협회는 최근 나주시 농민들에게 “올해는 배 수확이나 기타 농사일은 11만원 이하에 하기로 협의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나주시 농민들은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수직상승해 농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하루 8~9만원대였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지난해 13~15만원까지 뛰었다는 것이다.

특히 배 농사는 5월에 손이 많이 가는 ‘열매 수확 내기’ 작업을 해야 하는데, 짧은 기간에 인력이 많이 필요해 웃돈을 주고도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코로나 이전 8만~9만원 하던 일당 13~15만원 급증에 적정임금 정해 배 농가들 “숨통 트인다” 일제 환영

고용주간 담합 비취질 수 있어 논란 노동계 “임금 불만에 일터 벗어나면 불법체류자 양성 초래할 수도” 우려

힘들어져 인건비가 수직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은 당장 일손이 부족해 웃돈을 주고 직원을 고용하려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 많이 주는 농가만 찾는다. 인력사무소도 부족한 인력을 채우느라 날이 갈수록 인건비 가격을 높이는 등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최문환 나주시의원 주도로 지난해 7월부터 ‘농촌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연구회’를 운영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 의원은 “법이나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농가와 인력사무소에 적정 임금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것 뿐이다”며 “지역 농가와 인력사무소, 외국인 근로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 농민들 동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나주시 배 농가에서도 “숨통이 트인다”며 일제히 환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주시 금천면에서 2만여㎡(6000여평) 부지에 배 농사를 짓고 있는 김재용(52)씨는 “코로나 이후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과 과도한 인건비로 큰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한시름 덜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6000여평 부지에서 배 농사를 지으려면

해마다 연인원 500여명이 필요한데, 일당 1만원이 오를 때마다 연간 500만원씩 추가 지출이 나는 셈이다”며 “실제로 코로나 이전까지 해마다 3000여만 원 나가던 인건비가 지난 2년간 5000여만원까지 뛰었다”고 밝혔다.

농민 김진호(51)씨 또한 “금천면에서 6만 6000여㎡(2만여평) 규모의 배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난 2년간은 인건비가 폭등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해마다 지출하는 경영 비용 중 인건비 비율이 50% 가까이 차지할 정도였다”며 “농번기를 앞두고 적기에 적정 임금을 11만원으로 한다는 말이 공론화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근로자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고용주끼리 임금을 ‘담합’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업주 동의 없이 일터를 옮기기 힘든 등록 외국인근로자 등은 울며 겨자먹기로 폭락한 임금을 받고 일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급락한 임금에 불만을 갖게 돼 일터를 벗어날 경우 ‘불법체류자’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관희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무사는 “노동 임금은 시장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를 시의회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낮춘 건 이해되지 않는다”며 “별다른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자들 간 담합을 하고 인위적으로 임금을 낮춘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노사 계약 관계를 시의회 차원에서 개입해서 도 안 되고,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근로 지역을 옮기기 힘들고 의견을 피력하기 힘든 이주노동자들은 일방적인 임금 하락 피해를 받게 되므로 이들을 보호할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세월호 참사 9주기 기리는 노란 바람개비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앞두고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 설치된 노란 바람개비가 12일 바람을 따라 돌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발달장애인 예산 삭감 안돼…지원체계 필요”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촉구

인지·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 평생 돌봄을 받아야 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장애인 부모들로 구성된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이하 부모연대)는 12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발달장애인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달장애인은 특수성 때문에 시설들이 환자를 가려 받는 등의 이유로 거주시설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광주에서는 지난 2020년 3월 발달장애인 자녀를 키우는데 한계를 느낀 모친이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이에 광주시는 2016년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2020년에는 ‘최중증융합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연대측은 광주시가 처음 태도와는

달리 보여주기식 정책만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시가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소리없이 폐쇄했으며 발달장애인 주거체험 및 긴급돌봄센터는 사업 중복을 이유로 없앴다는 것이다. 또 전국 최초로 설치했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 전환지원팀이 전원 해고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모연대는 광주시가 구체적인 발달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광주시에 ▲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업무 전문관 배치 ▲지역사회 기반 행동지원서비스 도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다중지원 기관 지정 등을 요구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평생에 걸쳐 지원이 필요하다. 광주시가 광주다운 통합돌봄체계의 시작과 함께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요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di@kwangju.co.kr

전자발찌 떼지 2주만에 또 성범죄...징역 7년

전자발찌를 떼지 2주만에 성범죄를 저지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성규)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에서 홀로 사는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가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간치사죄로 2008년 징역 10년을 선

고받고 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2017년 형이 종료 됐지만 지난해 11월 15일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이다.

하지만 부착명령이 종료된 지 2주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1999년 강간치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로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상자회, 5·18교육관 위탁운영자 공모 탈락

광주시 심의서 ‘부적합’ 결론

광주시는 12일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위탁운영자 공모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월 21일부터 5·18부상자회를 5·

18교육관 위탁운영기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심의한 결과 최종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는 운영상 전문성 있는 기관과의 컨소시엄 방안 마련, 성과관리방안 제시, 민권위탁직원 전문성 향상 방법 제시, 5·18교육관 흥

보 및 효과적인 공간 활용 방안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5·18부상자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보완 서류를 받았음에도 사업 계획에 미흡한 점이 남아있다고 판단해 최종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오는 26일까지 위탁운영자 재공모 신청을 받고 오는 5월까지 운영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싼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대인동 **상업용지, 매매** 신안동

대인동 - 156평, 매매 - 21억

신안동 - 176평, 매매 - 23억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득, 변경가

문의. 010-3605-5000